



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6월 16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2015년도 예산지출 분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박주희)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제5조 위원회의 업무 '세월호참사 원인규명'이라는 문구 앞에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정밀조사 등'을 덧붙였고, 제7조2항을 신설해 위원회 활동기간을 위원회 정밀조사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했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세월호 인양 이후 1년까지로 늘림으로써 특조위는 적어도 내년 대선 직전까지 연장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세월호특조위가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남겼는지 의문을 갖는다. 특조위 본연의 임무인 세월호참사 규명이나 사회안전 대책 수립보다는, 국회 야당 정치권과 공조하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모습이나 특조위 파행 등이 더 자주 눈에 띄었다. 한편, 1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연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는 세월호특조위는 다가오는 6월말 활동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바른사회가 세월호특조위로부터 받은 2015년도 결산자료¹⁾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89억 원의 예산 중 70억 원(78.7%)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운영 87.5% 인건비 78.9% 집행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월호참사조사 사업은 42.9%만 예산집행이 이뤄졌다. 지난해 8월, 특조위는 당초 청구한 예산안 160억 원이 89억 원으로 삭감되자 조사 등 필수적인 예산이 깎여 정상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크게 반발했지만, 정작 결산내역을 보니 참사조사 집행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참사조사 사업 예산안 중 상당부분이 연구개발비 항목이다. 배정받은 14억 원 가운데 9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책정했고, 지난해 실제로는 3억4천만 원을 집행했다. 나머지 불용액은 2016년도로 이월했는데 사유는 2016년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체결 지연 등이라고 밝히고 있다.

1) 바른사회는 5월 4일, 세월호특조위에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과 특조 상임위원 업무추진비 세부사용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1항5호(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비공개)를 근거로 들며 거부했고, 그러면서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바른사회는 5월 20일, 이의신청을 통해 결산과 관계없이 예산집행현황은 공개되어야 하며 제9조1항5호(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함)를 근거로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특조위는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기한 7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고 전화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결국 끈질긴 요구 끝에 기한을 훌쩍 넘긴 6월 9일에서야 결산내역과 위원 업무추진비를 받을 수 있었다.

<표1> 세월호특조위 예산 배정 대비 집행 (단위: 원)

	예산 청구	예산 배정	예산 집행	집행률(집행/배정)
세월호참사조사	46억	14억	6억	42.9%
기관운영	92억	56억	49억	87.5%
인건비	22억	19억	15억	78.9%
합계	160억	89억	70억	78.7%

□세월호특조위 예산집행은 크게 ‘세월호참사조사’와 ‘기관운영’으로 나뉘는데, 예산지출 총 70억 6천만 원 가운데 참사조사에는 6억 원(8.5%)을 지출했으며 기관운영에는 64억6천만 원(91.5%)을 지출했다.

- 특조위가 길어야 1년6개월 운영되는 한시 조직임에도 새 사무기기와 컴퓨터 구입, 통신기반 구축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결산자료의 자산을 보면, 사무실조성을 위한 일반유형자산에 15억 원을 썼는데 기계장치 항목이 12억 원,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3억 원을 지출했다.

<표2> 2015년도 세월호특조위 결산자료 (단위: 원)

내 용	지출액	지출비율
세월호참사조사	603,736,550	8.5%
소통협력	65,329,800	0.9%
참사 실태 조사 연구	28,108,150	0.4%
진상규명 실지조사	219,000,740	3.1%
청문회 및 감정 감정 실시	68,755,290	1.0%
안전사회건설 종합대책 수립	94,570,470	1.3%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71,085,000	1.0%
자료기록관 설치 운영	56,887,100	0.8%
기관운영	6,460,369,620	91.5%
인건비	1,533,126,770	21.7%
기본경비	4,927,242,850	69.8%
합계	7,064,106,170	100%

□특조위 본연의 사업인 세월호참사조사 사업은 앞서 살펴본대로 ‘예산배정 대비 집행률’(42.9%)과 ‘전체예산 대비 지출비율’(8.5%)이 매우 낮다. 그런 것에 비해 특조위 조직은 너무 비대하다. 특조위 조직구조는 위원장 아래 1사무처 1실 1국 8과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 특조위 직원 수는 98명으로서 거의 100명에 이른다. 그 중 별정직이 62명, 파견 공무원이 31명이다.

<표3> 직제상 정원, 현원 (단위: 명, 2015.12.31. 기준)

직종\계급	계		정무직		고공단		3.4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20	98	5	5	2	1	1	1	8	8	23	22	38	29	39	28	4	4
정무직	5	5	5	5														
별정직	67	62			1				5	5	12	12	22	19	23	22	4	4
파견 공무원	48	31			1	1	1	1	3	3	11	10	16	10	16	6		

- 그간 세월호특조위가 특정 이념과 정파에 휘돌리고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지난해 10월 세월호특조위 진실규명소위원회에서는 합의가 안 된 ‘대통령 행적 조사’ 안건이 올라왔고 부위원장이 퇴장한 가운데 그 안건을 결의기구인 전원위원회에 회부했다. 11월 전원위원회에서 중립적인 특조위원들조차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결국 조사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특정 정파에 휘돌리는 것에 반발한 일부 특조위원들이 사의 표명을 하는 등 특조위는 파행을 겪었다.
-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은 올해 2월 사퇴의 변에서 “특조위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보다는 정부 책임론만 제기하는 것에 혈안이 돼 있다. 180건의 조사 신청을 받고서도 결과를 낸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본래 취지와 달리 특조위가 정치세력화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특조위 활동을 우려한 바 있다.
 - 4.13 총선 이후 야당세력이 커지자 야당 공조 1호 법안으로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다음날 특조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조사하겠다고며 서울지검을 향했다.
 - 2015년도 세월호특조위 결산에서 드러난 참사조사 사업의 낮은 예산지출비율과 특조위의 대통령 행적조사 안건 의결의 절차상 문제와 파행, 야당의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대선 직전까지) 추진, 특조위의 검찰청 조사 등을 연결시켜 보면, 과연 세월호특조위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